

“새만금 사업, 30년 추진 국가사업”

도의회 등, 국힘 윤재옥 원내대표에 새만금 예산 복원 요청... 여야 의원 찾아 예산 복원 활동 이어가

전북도의회 새만금SOC예산 정상화 및 진실규명 대응단은 지난날 30일, 새만금 비상대책회의 및 기업인 대표들과 함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찾아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예산 원상회복을 요청했다.

도의회 김정기(부안) 실무추진위원장 장과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 회장, 소재철 전북건설협회 회장, 박수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근욱 전북여성벤처협회 회장, 김경철 (주)비나텍 사장 등 도내 기업인들, 그리고 새만금 비상대책회의 조지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곧바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도의회 입장과 기업인들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김정기 위원장 등은 “새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면서 임기 중에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새만금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국가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지난 34년간 추진됐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북의 지역사업인 것처럼 치부됐다”라며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의



전북도의회 새만금SOC예산 정상화 및 진실규명 대응단은 지난날 30일, 새만금 비상대책회의 및 기업인 대표들과 함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찾아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예산 원상회복을 요청했다.

원상회복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전북을 대표해 온 원내대표를 찾은 기업인들은 “새만금 대규모 투자를 확정하거나 이와 연관된 기업들이 이번 예산안 삭감에 따라 투자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대규모 투자유치 차질을 우려한 2,527개 도내 연구

개발사업의 중단과 사업의 지연을 우려하며,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 협회회장은 “윤 대통령의 말씀처럼 새만금은 속도가 경쟁력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하는 것이 하루빨리 열려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면서 “공황이 없으면 양꼬 없는 땀방아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안에 대해선 정운천 의원을 통해 익히 들었다”라면서 “새만금 주요 SOC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정기 위원장 등은 윤 원내대표 면담 이후에도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병도 의원, 김운덕 의원, 정운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 새만금 예산안 복원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김재훈 기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유치 지원을”

도의회 예결특위, 기업유치지원실 등 대상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은태, 진안)는 지난 1일 내년 전북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기업유치지원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김술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내역이 충실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컨설팅의 전문가 풀(Pool)에 대해 묻고, 컨설팅에 대한 성과가 중복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기업예로해소지원단 소관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 애로 해소 운영’ 사업과 관련해 올 한해 성과에 대해 물으며, 성과에 비해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기업예로해소지원단 소관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 애로 해소 운영’ 사업과 관련해 기업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묻고, 특히 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과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문제 및 물류비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문하고,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시 판매 및 공예품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묻고, 다양한 지역과 공예품 교류를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데 삭감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교류 협력 강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외빈 초청 국가와 횡수에 대해 묻고, 내실있는 행사로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관련 ‘기업유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물으며, 시군 지원과 시스템 보안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실국별 홍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에 대해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기업 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에 대해 묻고, 전북도에서 활성화돼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권요안 도의원, 완주 청년

창업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지난날 30일 완주 지역 청년창업가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권요안 도의원, 전라북도 및 완주군 관계 공무원, 청년창업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창업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권요안 의원은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을 제고하기 지역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하며, “창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의견 청취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라북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은 “전라북도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계획 등의 정보공유 및 창업지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구축”, “창업초기 매출지원정책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전북도 창업지원과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을 위해 5개 분야 21개 사업에 71.6억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자승 스님 조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난 고(故) 자승 대종사를 조문했다.

김 의장은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자승 대종사의 영정 앞에서 현화한 뒤 조문록에 “해방당 자승 대종사의 근략왕생을 기원합니다”라고 남겼다.

1972년 해인사에서 출가한 자승 대종사는 조계종 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지냈다. 김 의장의 조문에는 조경호 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뉴시스

‘징역 5년 법정구속’ 김용 1심 판결

“군사독재 사법살인”

VS

“이재명 지도부 전원 사퇴”

박찬대 “유동규 진술에만 매달려... 명백한 정치 기소”

민주주의 실천행동 “불법 정치자금으로 선거 오염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지난 1일 여론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다”며 “재판부는 오라기라 갈팡질팡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돈을 썼다는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마저 언제 만나서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그 돈의 출처는 누구인지 등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 말할 때마다 달라졌다”며 “어떻게 유동규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심지어 도움 받은 적 없다는 사람은 유죄고, 돈을 썼다는 사람은 무죄라니 이런 판결이 공정하고 신빙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빙성 없는 오라기라한 진술만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해”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의 1심 판결은 민주당의 도덕성 붕괴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실천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밝혔다.

실천행동은 “공정해야 할 공당 민주당의 2021년 대선후보 경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날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명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옥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이 불법정치 자금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답을 향해선 “당의 가장 중대한 업무인 대선후보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김용과 그 관련자들을 업무 방해죄로 즉시 기소하라”며 “정당과 당원의 위신을 추락시켜 돌이키기 힘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율러 “돈봉부에 이어 불법정치자금 수수까지 민주당의 퇴행적 경선 관행이 더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뿐만 아니라 일체의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불공공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날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명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옥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민주 “대통령실, 반환 설문 참고 즉각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떳떳하다면 반환 설문 참고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 참고에 반환 설문 참고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또한 시기를 놓쳐 미처 반환하지 못했을 뿐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9월 받은 명품백을 1년이 넘도록 보관하고 있으면서

반환할 예정이냐니 국민에게 말장난하는 겁니까”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억지 변명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느냐”며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은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명품백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미적거리는 말용령실의 태도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만 입증할 뿐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발 사주·부정 청탁 등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지난 1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두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검사가 탄핵 소추된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 통과에 이어 현정사상 두 번째다.

국회 과반 의석을 둔 민주당(168석)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날 9일 손 검사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는 부정 청탁 등을 들어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뉴시스

오창숙 남원시의원 발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조례 등 확정

남원시의회 제 261회 정례회에서 오창숙 의원이 발의한 사실상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의 자립을 위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조례와 보건위생용품의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보급을 위한 조례가 확정됐다.

이해 확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국한해 지원되고 있던 보건위생 용품이 형식적 요건을 결여해 지원받지 못했던 청소년과 청년들을 포함한 남원시 여성청소년 전체에게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합과우 아트밸리 사업의 추진에서 공공조원 물의 납발을 막고 북한 이주민의 납입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의 다양화와 확대를 요청하는 등 시정을 꼼꼼히 살피고 동시에 시 세입·세출과 사업별 재정 건전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날카로운 시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를 향한 경종을 울렸다.

한편 오창숙 의원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 농촌유학 육성·지원 근거 마련

김순덕 시의원 대표발의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익산시가 농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길영, 김순덕 익산시의원, 소길영 익산시의원, 이종현 익산시의원 공동 발의한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농촌유학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지역구(팔봉, 금마, 왕궁, 춘포, 여산, 남산) 의원인 김순덕, 소길영, 이종현 의원이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 수 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학교와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 관련 조례를 공동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촌유학은 전라북도 관의 지역에 사는 초·중·고학생들이 전·입학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는 것을 말하며 이 조례안은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순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형 농촌유학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익산시



김순덕 익산시의원, 소길영 익산시의원, 이종현 익산시의원

가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골프, 식품, 말 산업 등의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길영 의원은 “최근 농촌유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비율이 높다”며 “농촌유학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타 시군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현 의원 역시 “전북교육청이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익산시도 농촌유학과 관련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단순히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찾아가고 싶은 농촌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